

대법원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2022. 1. 16.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A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7882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의 지위

- 1995. 7.~2002. 6. 제2대, 제3대 영광군의회의원
- 2002. 7.~2006. 6. 제7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2006. 7.~2008. 3. 제46대 영광군수
-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피고인은 2022. 1. 16. 18:30경 선거구민 A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

이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A의 차량 조수석에 내려놓고 가 제공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벌금 200만 원)

- 피고인은 A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쌍방 항소

■ 원심 ➡ 쌍방 항소기각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피고인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¹⁾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의 의미

1)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나. 판결 결과

- 피고인의 상고 기각

다. 판단 내용

-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함.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